

서울 동 부 지 방 법 원

제 13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 2013가합12127 자동차소유권반환
원 고 ○○○
○○ ○○구 ○○○ ○○
피 고 주식회사 △△△
△△ △△구 △△△, △△△
대표이사 □□□
지배인 ◆◆◆
변 론 종 결 2014. 5. 22.
판 결 선 고 2014. 6. 12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서울△△바△△△△호의 영업용 번호의 소유권을 반환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9. 1. 20. 피고로부터 ○○18톤카고트럭(자동차등록번호 : 서울○○바○○○○호, 차대번호 : 생략, 이하, '이 사건 자동차'라 한다)을 매수하고,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임받아 이를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 관리계약(이하,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나.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관리하다가, 2013. 7. 16. 소외 홍●●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였다.

다. 한편,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번호는, 2010. 5. 20. 서울●●바●●●●로, 2011. 8. 23. 서울△△바△△△△로 각 변경등록 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서울 강동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09. 1. 20.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함께 그 영업용 번호 서울82바9776의 소유권을 30,000,000원에 매수하고,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 및 위 영업용 번호를 현물출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.

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업용 번호의 소유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나. 청구원인에 관하여

(1) 관련 법리

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는 그 운송사업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고,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운송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등록번호 그대로 이전등록을 할 수는 없고 새로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된다.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0조,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, 자동차의 등록번호는 시·도지사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자동차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한 것이고, 그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은 그 자동차에 부착·봉인한 표지에 불과할 뿐이므로, 자동차의 등록번호나 그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개인에게 배타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고, 등록번호판 자체가 그 자동차와 분리되어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되거나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(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1다39793 판결 등 참조).

(2) 판단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,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자동차 등록번호(서울△△바△△△△)는 사인(私人)에게 귀속되는 고유재산이 아니고 양도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며, 당사자 사이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법도 없는 것이므로,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. 1. 20.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함께 그 영업용 번호 서울△△바△△△△을 함께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영업용 번호 자체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, 결국 위 영업용 번호의 소유권을 이 사건 자동차와는 별도로 원고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양사연

판사 기진석

판사 송승환